

전북 과학기술 발전 위해 '한마음 한뜻'

전북자치도, 회의 대폭 간소화

전북자치도-한국과총,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지역 과학기술 발전·정책개발 통한 도정 현안 해결 협력 약속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 이하 한국과총)와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정책 개발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이태식 한국과총회장, 양문식 한국과총 전북지역연합회장, 유동진 대한화학회 전북지부장 등 전북 지역 7개 과학기술단체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전북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장 등 도내 3개 과학기술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자치도와 한국과총은 앞으로 전북 도정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혁신적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역과학기술 발전과 인재육성 공동연구개발 △지역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 교류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금은 과학기술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정책 개발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때"라며, "이번 한국과총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 수소 및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태식 과총 회장은 "전북자치도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전북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총은 과학기술단체 육성·지원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촉진을 위해 1966년 설립되어 402개 학술단체를 포함한 총 612개 회

원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13개의 지역별 연합회를 운영 중인 과학기술계 대표 연합체다.

또한, 국내·외 과학기술단체 간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기반조성, 중앙정부 과학기술 정책자문 및 제안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요일은 '회의 없는 날'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직원들의 회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현업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체 운영 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현안들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정해진 방향성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회의체 운영 횟수를 대폭 축소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기존 주 1회 개최되던 간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고, 주 2회 개최되던 정책 조정회의는 주 1회씩만 개최하게 되어 수요일에 운영되는 회의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또한, 기존 부지사 주재로 개최되던 회의도 티타임으로 변경하여 자율적인 소통의 시간으로 개선 자유로운 소통 방식으로 전환하여 직원들의 부담을 덜게 된다.

이종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회의체 운영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의의 횟수를 줄이는 대신 현장을 나가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민생 현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487억 지원

한우 농가 332억 우선 배정·농가당 최대 9억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상반기에 이어 산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사료구매 자금 48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로써 상반기 1,517억 원을 포함한 전년 대비 367억 증액된 2,004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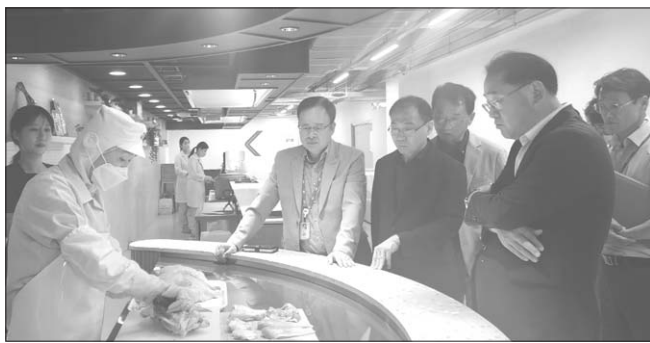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료비 상승과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는 332억원(68%)이 우선 배정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중훈 경제부지사, 닭고기 도축장 현장 안전점검

하림 방문해 닭고기 수급상황 여름철 시설 위생관리 등 살펴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22일 '브랜드 파워 1위' 국내 최대의 닭고기 생산 공장인 (주)하림을 방문해 여름 성수기 닭고기 수급 상황과 집중호우 대비 도축장 안전시설 등을 점검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22일 '브랜드 파워 1위' 국내 최대의 닭고기 생산 공장인 (주)하림을 방문해 여름 성수기 닭고기 수급 상황과 집중호우 대비 도축장 안전시설 등을 점검했다.

(주)하림은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육·가공·유통·수출 등 닭고기 시장 리더로서 축산농가와 협력업체들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8월까지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도축장 안전 시설과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닭고기 수급 상황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지난 5월 (주)하림 삼계탕이 국

내산 축산물로써 최초로 유럽 수출을 이뤄낸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유럽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국내 닭고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하림이 지역 상생과 가족살림 예방 및 축산환경 개선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 전주장학숙 등 방문 점검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2일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전주장학숙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학생들과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도내 미래 인재 양성에 있어 평생교육진흥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 및 평생교육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전주장학숙에서는 입학생들의 생활, 편의시설 및 식당 등에 대한 시설점검이 이루어졌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1999년 개관하여 건물이 노후화된 만큼 입학생들의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설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시설점검 후 입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한 특별 합동점검

도-교육청-시군, 9월 6일까지 식중독 취약시설 대상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북자치도와 교육청, 시·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학교급식납품업체, 위생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 및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등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 기준 준수 △식재료 운송 차량 온도 기준(냉장·냉동) 준수 △소비(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 보관 준수 △조리장 내 위생 청결 관리 △개인위생관리 △지하수 살균소독기(자동염소 투입기) 정상 작동 관리 등이다.

먼저 도는 교육청, 시·군, 소비자직품위생감시원 등 64명 16개 번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

는 급식납품업체,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을 점검하고 급식·조리·배식 시 식중독 예방 자재 체크리스트 활용법,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 수칙 안내 등의 교육·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8월 말부터는 신학기를 맞이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대번호 제공 식품과 조리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안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회 발굴해야"

도의회 문안위, 도 문화체육관광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2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박용근 의원(장수)은 장애인 체육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장애인 체육회의 위원 중 비장애인인 50%이 넘는 상황으로, 장애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고창)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도시락 건립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지 못해 국비를 이용해 반납하게 된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국비를 확보하고도 이를 반납하게 된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강조했

다. 또한, 전북도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북이 음식 관광의 메카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의 메카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배급률을 높여 식량자급률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북 음식의 신뢰감을 높이고 차별화를 이룰 것을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자치도가 내세울 수 있는 관광명승과 지역상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관광, 체육, 문

화, 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이 보다 더 많은 회의와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인 자세로 전북도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공연 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다양한 방안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연 예술인과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전북특별자치도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관광의 메카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예술계 종사자들이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한우 수급조절 위한 대책 마련해야"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한우 산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축산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소했고, 사육두수는 3.4%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며, "압소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자율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0kg 압소 평균 산지 가격은 465만원으로 2021년 645만원보다 180만원 가량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우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도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4년 3월 기준 42만 두로, 2021년(40만 두)보다 2만 마리 이상 증가했으며, 가격 폭락에도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가축구입비, 사료값까지 폭등하면서 2023년 기준, 비육우 한 마리 생산비는 1,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임 의원은 "생산비를 제외하고 나면 농가에서는 비육우 한 마리당 142만 원의 빛남 남는 셈으로, 한우를 키울수록 농가는 손해를 보고 있어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 21년부터 송아지 생산감소를 위해 자율적 압소 감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송아지 출생이 9.1%

증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사료구매 자금의 금리를 1.4%에서 1% 이하로 인하하고,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태장려금과 하위 등급의 차액을 보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육기간을 단축하고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개량사업 등을 통한 자력해야 한다"며, 유전자 검사를 통한 능력 감소 도태, 고능력 압소 선발 및 번식우 활용 등을 제안했다.

덧붙여, "지난 5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한우산업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근간을 이루는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호 기자